

광주시, 오늘부터 체육동호회 등 전면금지

‘강화된 1.5단계’ 이어 추가 조치...불붙은 감염 차단 ‘주력’ 시·구 공직자 1만3000여 명, 사모임 금지·재택 근무 확대 시민 5대 행동강령 제안...“방역수칙 준수에 협조·참여를”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중학교에서 방역당국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에 일상생활 접촉을 통해 지역 사회 전반에 감염이 걸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 방역 대응을 추가 강화한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오는 2일 오전 0시를 기해 생활체육 동호회와 집단 체육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1일 밝혔

다.
이날부터 강화된 1.5단계 거리 두기 만으로는 최근 불붙은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린 추가 방역 조치다.
특히 축구·골프 모임 등을 매개로 지역사회 곳곳으로 바이러스가 퍼지

고 있는 감염 추이를 고려했다고 시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형마트와 대기업 주요 생산시설, 식당·교회, 식당, 축구·골프 모임, 당구장, 학교, 요양원 등 지역사회 곳곳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운영 중단 사태가 이어져 지역경제에 비상이 걸렸고, 각급 학교 17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학생·교직원의 추가 감염 위험이 높다는 판단이다.

광주 제1시립병원을 오간 간병인이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 취약 시설 내 전파 위험도 있다.

시 방역당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 지 모르는 감염 유행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부터 거리 두기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다.

광주시·자치구와 시 산하기관 공직자 1만3000여 명에게는 모임 전면 금

지, 재택근무 확대 등 비상명령이 내려졌다.

공직자들은 동문화·동호회·각종모임·회식 등 모든 사적 모임 참석이 금지된다. 공적 회의·모임도 가급적 연기하고 불가하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결혼·장례식 등 경조사와 밀집·밀폐·밀접 장소도 방문할 수 없다. 각 부서는 출장을 자제하고 밀집도 완화를 위해 현원의 20% 이상이 재택 근무에 들어간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대책도 마련한다.

시민들에게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5대 행동강령을 제안했다.

강령은 ▲최소한 경제활동 ▲가족·직장 외 외부인과의 만남·모임 자제 ▲대화시 마스크 착용·식사 중 대화 자제 ▲연말 외부 모임 지양 ▲이상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등이다.

이웅섭 광주시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이 최대 위기 상황이다”며 “시민 개개인이 생각과 행동을 바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지역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음주상태에서 주차하다아파트 담 들이받은 2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아파트 단지 내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음주 상태에서 주차를 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면허 취소 수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영암 마을회관 보일러실 화재·폭발...인명피해 없어

1일 오전 8시11분께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한 마을회관 내 LPG 보일러실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꺼졌다.

사고 당시 마을 회관은 비어있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보일러실 벽면과 보일러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다.

소방당국은 보일러 가동 도중발생한 불완전 연소 가스와 주변에 놓여 있던 등유에서 나온 유증기가 밀폐 공간에 축적돼 폭발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이드미러 안 접힌 차량만 노린 40대 구속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 등에서 14차례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만 골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별통보 여친 둔기 폭행 30대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사흘동안 가둔 후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A(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둔 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시 외출한 사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파악한 A씨는 곧바로 도주했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사흘만에 체포됐다.

지인 차량으로 이동하던 A씨는 미리 차량을 파악한 경찰에 덤피가 잡혔다.

경찰은 차량수배시스템(WASS)에 찍힌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8일 오후 5시 2분께 이동 중이던 그를 제주 시내 모처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온몸에 둔기 등으로 맞은 멍자욱과 함께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출소했지만, 8개월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참여자치21 “전두환 판결 형량 부족...검찰 즉시 항소해야”

“정치권, 5·18 역사 왜곡 특별법 하루빨리 제정하라”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89)씨의 1심 판결 형량이 충분치 않다고 검찰에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5·18 역사 왜곡 근절을 위한 조속한 입법도 강조했다.

참여자치21은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5·18 헬기 사격이 인정됐다.

이를 부정하고 조롱한 전두환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사필귀정이다”라면서도 “선고 형량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잡고, 조비오 신부와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은 사죄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조롱해 왔다”며 “광주시민들에게 정치권과 검찰·법원이 어떤 잘못을 저

질렀는지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검찰은 5·18 헬기 사격에 대한 탄흔 증거와 다수 증인, 정황 증거 등이 있었음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에 대해선 “5·18 헬기 사격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전두환의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하고 심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라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을 향해 5·18 역사 왜곡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단체는 “역사 왜곡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미적했다. 제2, 제3의 역사 왜곡 시도에 문을 열어 놓은 것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을 분명히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5·18 단체 회원들이 구속 촉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처벌하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 걸음이고,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항소심에서는) 전두환을 구속해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유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역사의 정의를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동취재본부

여수 냉장고 속 신생아

“구타나 외력 손상 없어”

전남 여수의 한 가정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에서 구타나 물리적인 힘을 가한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뒤 2년 동안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던 신생아에 대한 국과수 부검의 1차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냉장고에 보관된 경위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정밀부검을 위한 조직검사 등이 2달여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에 고나 과실 부분에 대해 수사한 뒤 이번주 내 검찰에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추후 정밀 부검 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